

과학기술부의 신년도 과학기술정책방향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박영일 실장(yipark@most.go.kr)

1. 우리의 경제 · 산업발전과 과학기술

우리 경제는 지난 40여년간 시기별 성장동력에 대응한 산업구조로 성공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 인적자원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 주도의 성장 전략에 힘입어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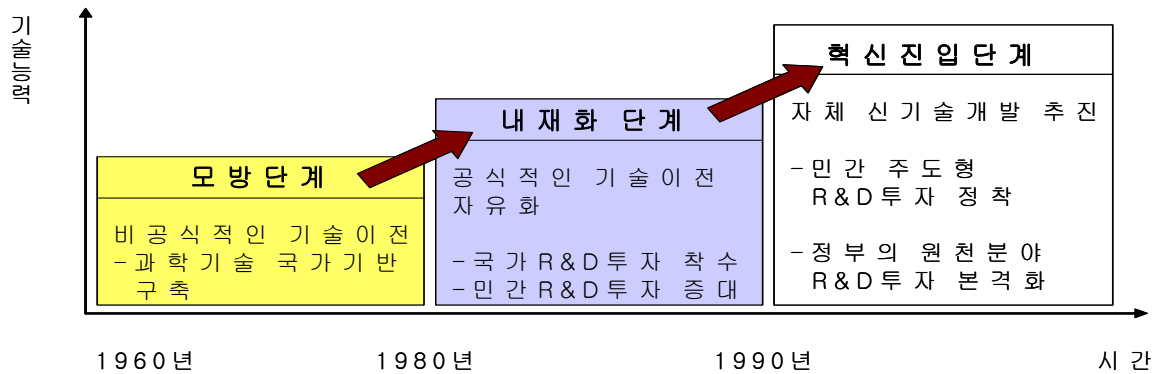
<표 1> 우리 경제의 시기별 성장

구 분	1960	1970	1980	1990	2002(*잠정)
GDP(10억달러)	2	8	62	253	477*
1인당 GDP(달러)	80	248	1,632	5,900	10,013*
산업구조변화 (주력 수출상품: 1위~3위)	광산물 텅스텐 건설	섬유류 합판 가발	섬유류 전자제품 철강제품	의류 반도체 신발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핵심 경제성장동력	1차산업 노동	경공업 수출	경/중화학공업 자본	중화학/첨단산업 제조기술	첨단/중화학산업 첨단기술

그 동안 경제성장은 선진국 자본 · 기술의 적극적 도입 · 활용, 수요지향성(수출시장 초점), 인적자원을 핵심요소로 집중 육성, 민간주도체제의 기업 육성(초기 정부주도), 산업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성원 등과 같은 특징과 함께 전반적으로 『선진국 Catch-up 전략』에 의존한 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밑바탕에는 과학기술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즉,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과학기술은 '60-'70년대의 모방 · 학습단계, '80년대의 내재화단계, '90년대 이후의 신기술 개발경쟁에 뛰어드는 혁신단계로 각각 진화해 왔다.

<그림 1> 시기별 과학기술혁신 역량 발전 단계



2.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와 대응방향

그러나 우리 경제는 지난 1995년 이래로 OECD 상위 20개국 평균소득의 38% 수준인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서 8년간 정체하고 있다(1995년 10,823불 ⇒ 2002년 10,013불). 1996년에 OECD 회원국이 되었으나, 1998년의 외환위기로 6,744불까지 추락하면서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 신용등급 하락(무디스사 : 1995년 A1 ⇒ 2003년 A3), 환율 인상(원/달러 평균환율 : 1995년 771원 ⇒ 2003년 1,193원), 총저축률 하락(1995년 35.5% ⇒ 2003년 26%) 및 GDP 대비 설비투자율의 하락(1995년 14.9% ⇒ 2002년 10.7%)을 동반하였고, 국가 경쟁력도 하락(IMD, 2002 : 1995년 24위 ⇒ 2003년 27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5천불 달성기(1970-1989)의 7%대에서 1만불 이후 기간(1996-2003) 중의 5%대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이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4.0%나 그 이하로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표 2 참조).

<표 2> 기간별 잠재성장률 변화 추이

구분	5천불 달성기 ('70-'89)	1만불 달성기 ('90-'95)	1만불 이후 ('96-2003)	2004-2010년
잠재성장률(%)	7.9	7.0	5.4	4.0
요소투입(%p)	5.1	4.0	2.3	2.0
<자본>	<2.3>	<2.2>	<1.3>	<1.4>
<노동>	<2.9>	<1.8>	<1.0>	<0.6>
생산성(%p)	2.8	3.0	3.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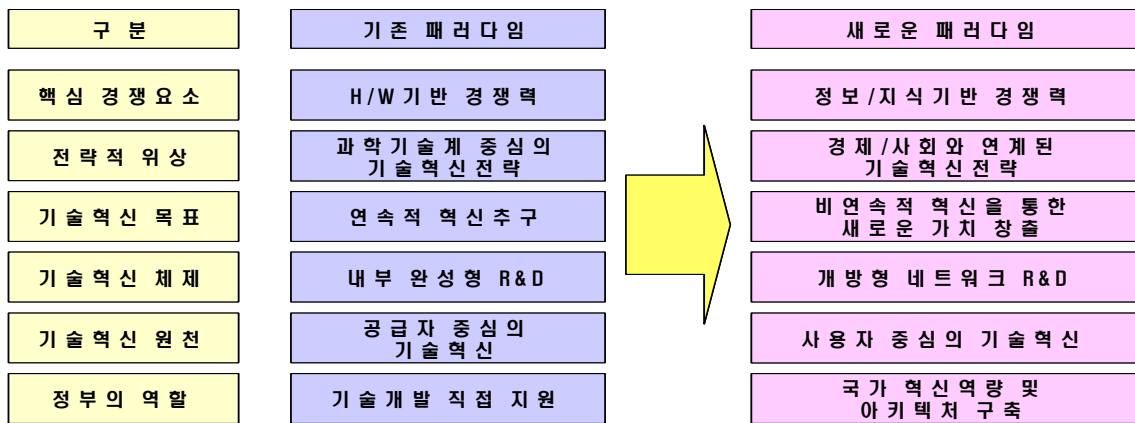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2004년

우리경제는 현재 성장률 둔화, 제조업 공동화현상의 급진전 및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성장동력원인 원천·핵심기술 부족 및 선진국의 견제 심화, 중국의 급성

장에 따른 기회와 위협, 주력기간산업 분야의 세계공급과잉 및 낮은 질적 경쟁력이란 3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마디로, 제조업 중심의 모방적 생산력에 기반한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선진국과 동일한 시기에 독자적인 세계 일류기술·제품을 확보하고 첨단·주력 제품에서 선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질적 기술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혁신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그림 2> 참조) 반도체 이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주력 기간산업(Cash cow형 산업)의 핵심역량을 생산에서 기술력 중심으로 전환하며, 지식기반형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림 2> 새로운 혁신정책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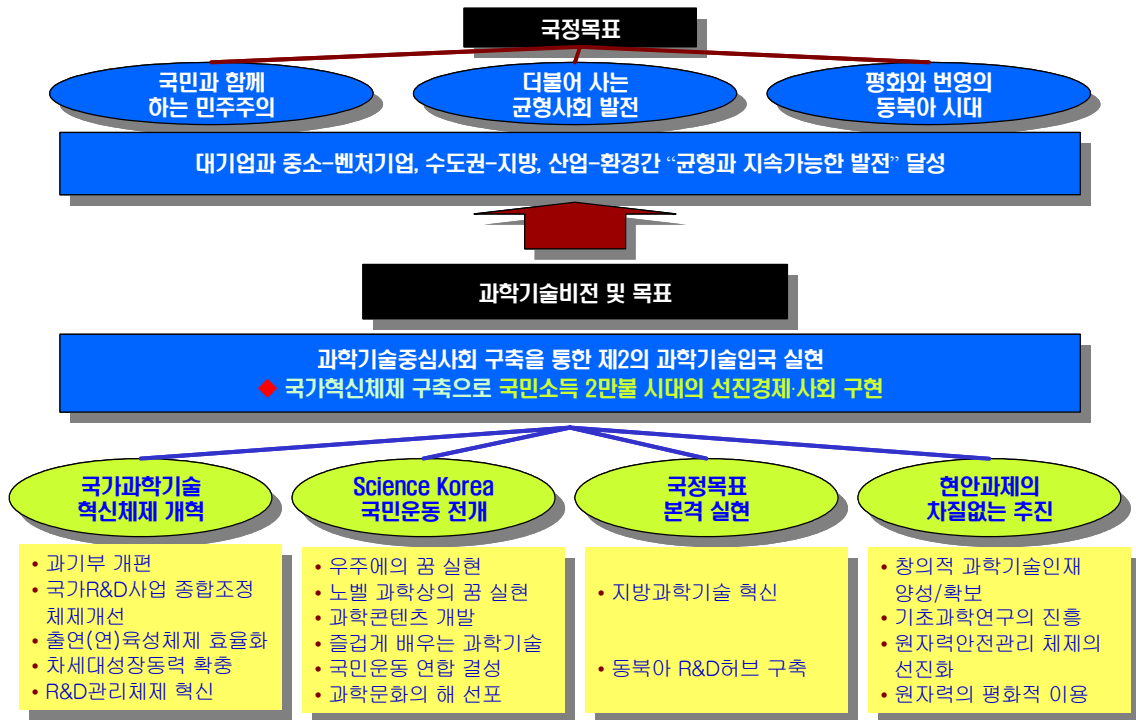
3. 2004년도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경우, 2004년도에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경제활력을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기 위해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능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3년에 마련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개혁 Road Map을 착실하게 실천하고, 과학기술인, 기업인 및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함께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학기술정책 방향은 첫째,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개혁, 둘째, Science Korea 운동의 범 국민적 전개, 셋째, 국정목표의 본격 실현, 넷째, 현안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그림 3> 2004년도 과학기술정책 목표 및 중점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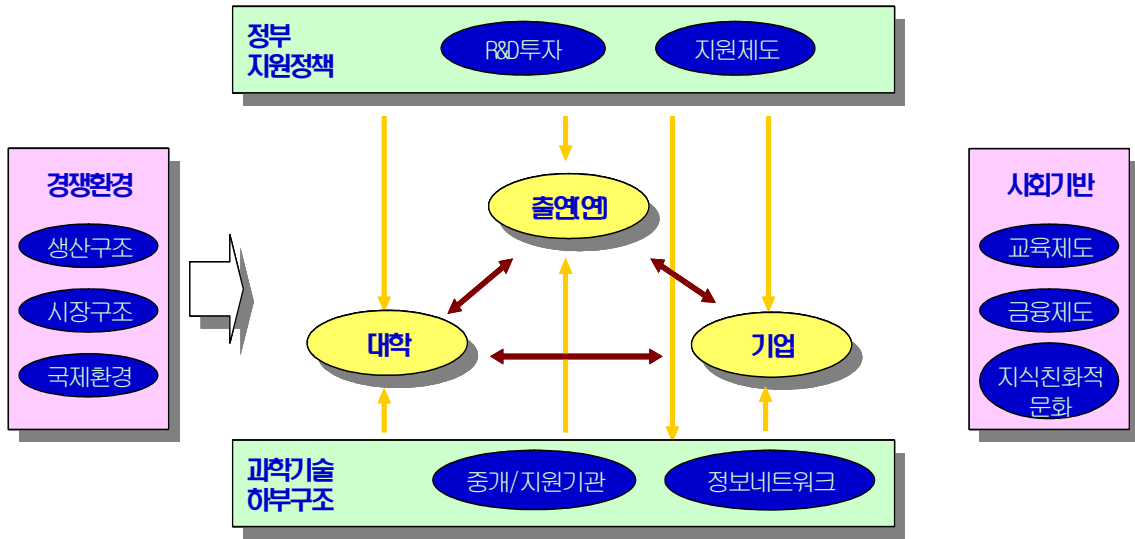
4. 2004년도 중점 추진과제

1) 국가혁신체제의 효율성 강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한 『과학기술입국』, 『인재입국』의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이 성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국가혁신체제(NIS)를 강화하고 효율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국가기술혁신협의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NIS구축을 위한 Master Plan(안)의 수립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부가 실질적인 과학기술 예산 심의조정권을 바탕으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국가 R&D(관련 산업정책 포함), 인력(산업현장인력 포함), 지역혁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총괄기획·조정·평가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4> 국가혁신체제의 구조



※ 국가혁신체제(NIS) : 새로운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 및 공공조직과 제도들의 네트워크

① 산-학-연 혁신주체의 자체 역량 및 혁신주체간 협력 강화

우선,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자체 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대내외 혁신주체들간의 상호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자생적 혁신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R&D투자의 확대(선진국 수준인 매출액 대비 3~4%)를 유도하여 새로운 연구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면서 지식창출형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의 역할을 산업수요 지향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대학 내 대규모 연구소의 설립 및 연구비·연구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출연(연)을 기관특성에 맞게 전문화해 나가고, 예산지원 및 자율권 등을 확대하여 안정적 연구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덕종합R&D특구 지정, 파스퇴르(연) 국내 유치 등 해외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선진국 수준의 핵심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② 제도 및 환경개선

기술혁신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제도적 환경과 기술혁신 친화적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특허 및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강화하며,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상시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혁신해 나가고,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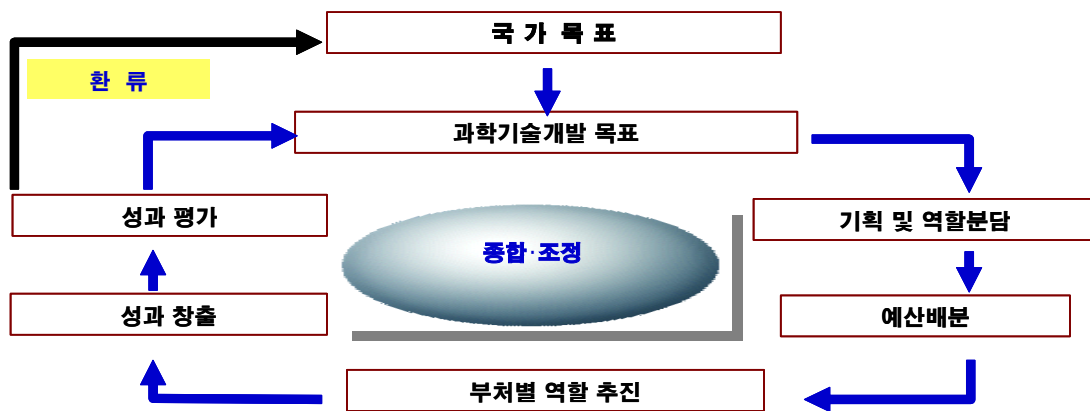
③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개혁

상위의 국가목표에서 도출된 과학기술(산업·인력양성·지역혁신 정책 포함) 관련 의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가목표 실현에 부합되는 최상의 성과를 산출하도록 국가과학기술정책 운영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즉, 국가목표에 부응하는 과학기술개발 목표를 과학기술계의 역량과 산업계·국민의 수요에 맞도록 설정하고, 종합적인 차원의 기획과 예산 배분에 따라 각 부처가 사업을 추진하며, 각 부처에서 창출한 성과를 평가하여 더 발전적인 목표로 환류시키는 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과학기술개발목표 설정, 기획 및 역할 분담, 예산배분, 성과 평가를 책임 있게 종합·조정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림 5>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운영



2) 국가 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체제의 개선

국가발전목표에 부합되는 R&D예산의 배분·활용을 목표로 하여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조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각 부처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국가전략목표 및 각 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R&D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로부터 R&D예산총액을 배정받아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세부사업별 예산 조정을 추진하되,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R&D사업별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기술부는 향후 기능재정립을 통해 산업기술, 인력정책 및 정부 R&D 예산에 대한 종합조정을 전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 경제, 재정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을 파견받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가칭)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제정하여 성과중심의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합리적인 사전조정체제를 구축하여 R&D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3) 차세대 성장동력의 체계적 확충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할 차세대 성장동력을 부처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 추진 현황을 보면, 시장규모, 기술개발 및 시장확보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 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신약/장기)을 선정('03.8)하였고, 산업별 추진 세부과제에 대한 부처별 역할분담에 따라 추진계획(안)을 수립('03.9~12)하였다.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4-5년 이후 출시가 가능한 제품(End Product)을 중심으로 최종목표와 사업범위를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기획된 신규과제를 중심으로 착수하되, 기존 수행과제 중 제품에 직접 연관되는 기술들을 선별하여 차세대성장동력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둘째, 주요 제품별로 사업을 총괄 주도할 수 있는 PM(Project Manager; 사업단장)을 임명하여 전주기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셋째, 범부처적 공동 추진체제를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부처간 이견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산하에 『차세대성장동력총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체 산업의 사전조정, 예산배분, 평가, 신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발굴·조정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별로 『차세대성장동력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산업내의 사업계획 수립, 예산배분, 평가 및 조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부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개발 Item(End Product)과 PM, 기업참여 방안, 총(년도별) 예산 및 목표, 성과예측 등을 포함하는 요지를 주관부처에서 제출받아 종합 검토 후 착수하게 된다. 즉, 과학기술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 및 총괄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체 산업에 대한 예산배분,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총괄조정 수행에 초점을 두게 되고,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는 산업별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별 사업의 총괄과 그 수행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4) Science Korea 국민운동 전개

정부는 금년을 『과학문화의 해』로 지정하고, 4월 21일 과학의 날에 『Science Korea 국민운동』 선포식을 갖고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 추진배경으로는 첫째,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과 제2의 과학기술입국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의 과학정신(창의·합리·효율)을 고취함으로써 원칙이 투명하게 지켜지는 사회의 기틀을 만들어 가려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탐구의욕을 진작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북돋움으로써 우수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Science Korea 국민운동』은 (가칭) 『Science Korea 국민운동연합』을 거국적으로 결성하여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정부지원 형태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핵심이 되고, 과학기술·경제·사회·문화·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될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을 계획 중인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자발적인 유망과학자(노벨상) 후원회 결성, 노벨상꿈나무육성, 과학기술인 현장제정, 닦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자의 발굴·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배출(외국우주선 탑승), 『국민참여 이공계장학생』 선발(년 12명)·시상(KBS방영), 사회 현안문제(광우병, 사스, 방폐장) 토론을 위한 『시민과학기술·사회포럼』을 개최하고,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리더스 사이언스 오블리주』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재미있고 교육적인 매체 및 콘텐츠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TV채널』을 설치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프로그램을 방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소설·연극·드라마 등에 과학기술 관련 내용을 삽입하고, 과학홍보대사를 확대(455 ⇒ 1,000명)하여 모교 방문 강연 등을 지원하며, 재미있고 쉬운 과학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수도권(과천)에 건립예정인 국립과학관을 과학문화의 전당으로 만들어 가고, 주민의 생활 속에 파고드는 과학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EXPO 과학공원을 체험형 과학놀이 공간으로 개편하며, 지역별로 특화된 테마과학관(영양반딧불이 천문대등 6개, 2004년 34억원)을 건설하여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시키고, 읍·면·동(3554개)의 주민자치센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과학 놀이터를 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의 혁신

정부는 2007년까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에는 지방과학기술의 혁신거점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와 모델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클러스터를 총괄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차원에서 지역별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기준

을 수립하고, 대학주도형, 지방정부 주도형, 특정기업주도형 등으로 구분하여 모델 간의 장·단점과 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 자생적 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정부 R&D예산 중 지방에 대한 지원 비율을 확대('03년 27%→'04년 32%)해 나가고, 이를 위해 수도권 연구기관의 지방 이전 및 분소 설치, 지자체 출연(연)의 설립 지원, 지방의 연구인프라 확충 및 지역할당제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05-'07)』을 수립하면서 지역 전략·특화분야와 관련된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 과학기술혁신 로드맵을 금년 말까지 작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 거점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연구개발클러스터(2004년 4개)의 구성을 지원하고, 권역 내 3~4개 우수 이공계 대학들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설립을 지원하고, 지역별 강점·특화분야의 연구개발을 선도할 지자체 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지원(8개소)할 계획이다.

지역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R&D특구의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덕연구단지, 대덕 테크노밸리, EXPO과학공원 등을 통합하여 『대덕 종합 R&D 특구』로 지정·육성하기 위해 (가칭) 『R&D 특구법』을 제정하고 (가칭) 『대덕 종합연구개발 특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술혁신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전북 등 6개 시·도에 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전담조직의 설치를 모든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협력관의 파견을 확대(2인→4인)하고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6) 동북아시대를 여는 R&D 허브의 구축

우리나라가 동북아 기술혁신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유치 활동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핵심기술 분야별로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의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 유치업무를 총괄하는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해 One-Stop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부지·세제·인력 등 유치 환경과 주거·교육·의료 등 생활환경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EXPO 과학관 부지(12만평) 활용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R&D 특구 및 지역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한 유치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를 마무리할 것이다. 한국파스퇴르 연구소를 개소하여 상반기 중 연구사업을 개시하고, 영국 카벤디쉬 연구소와의 공동연구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북아 기술·경영대학원 프로그램 설치를 추진하되, 10대 성장산업 중 시장규모와 부가가치가 큰 미래형자동차분야의 대학원과정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

도할 계획이다. 기존 대학(원)과 차별화된 교육 모델로서 원천기술개발 능력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현장 고급인력양성의 특화대학원과정으로 운영하고, 핵심기술 개발, 고급 기술경영인력 양성, 혁신클러스터의 구심체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캠퍼스 내 영어를 공용화하며,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과학기술협력체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3월 한·중·일 과학기술국장회의에서 『동북아 고위급 과학기술협력위원회』의 설립 추진을 안전화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SARS, 황사 등 동북아 지역의 공동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 인력 교류, 포럼개최 등을 시범사업으로 착수해 나갈 계획이다.

7)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양성·확보

정부는 2007년까지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연구인력 1만명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년 3월까지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견인할 핵심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공계 인력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적인 교육·연구모델을 다양하게 모색·정립할 계획이다. KAIST에 『이종문 기술·경영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기술경영 능력과 국제적 소양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주요 대학의 국가핵심연구센터에 학제간의 신생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쉽고 재미있는 과학 교재의 저술과 교육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과학교육연구센터('03.12월 설치)가 중심이 되어 초·중등 교과 과정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되, 만화, 영상, 게임 등 청소년에게 친숙한 매체를 활용한 체험학습형 교재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기 위해 대통령 과학장학생의 선발·지원을 확대('03년 110명 ⇒ '04년 250명)하고, 과학영재교육원을 증설('03년 19개 ⇒ '04년 23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우수 연구개발 인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해 박사 후 해외연수(400명), 석·박사 학위취득(575명) 및 해외공동연구(200명)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연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해외고급과학두뇌 유치(480명), 개도국 우수 학생 초청연수(320명), 외국연구인력 현지 활용(25명) 등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을 배증('03년 417명 ⇒ '04년 825명)할 계획이다.

8) 기초과학 연구의 진흥

기초과학과 관련한 정부의 목표는 2007년까지 세계 10위권 수준 달성이다. 금년에 정부는 R&D예산 중 기초과학투자를 20.7%로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우선 기초과학

연구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참여 및 공동이행을 위한 협정 비준 등 국내 수행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지역분소 2개를 추가로 설치(총 8개소)하며, 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방사광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장비의 확충과 공동활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부설 이공계 연구소를 대학 연구활동의 근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100여개를 선정(2004~2008년)하여 관련 기관간 협력체제하에 추진하고, 그 중 3~5개 연구소는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

창의적인 기초과학연구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 및 소규모 연구팀의 연구를 지원('04년 1,041억원)하고, SRC/ERC(101개, 722억원), 국가핵심연구센터(4개, 60억원), 창의적 연구진흥사업(57개 연구단, 354억원) 등 학제간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수학분야의 창의적 연구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수리과학전문연구소』의 설립을 추진하고, 『차세대 핵심연구주제발굴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연구경험이 다른 연구자로 구성된 팀의 연구주제발굴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9) 이공계 전공자 일자리 1만개 창출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특히, 자연계 석·박사 학위자의 실업률이 특히 높은 실정이다. 2003년도 석·박사 학위 취득자 22,918명 중 미취업자는 3,806명으로 이들의 실업률(16.6%)이 청년실업률(8.6%)보다 2배 가량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7년까지 이공계 석·박사의 일자리를 1만개 이상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석·박사 학위를 받은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연구연수 지원을 통해 총 7,600명을,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고용 지원을 통해 총 1,800명을, 전문경력인사 활용 지원을 통해 총 300명 규모를, 5급 기술직 공무원 채용확대를 통해 총 300명 규모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3> 이공계 전공자 일자리 1만개 창출

(단위: 명)

사업명	2004	2005	2006	2007	계
석·박사 연구연수 지원('03: 960명)	1,110	1,500	2,300	2,690	7,600
중소기업 인력고용지원('04 신규사업)	270	360	540	630	1,800
전문경력인사 활용('03: 54명)	57	70	80	90	297
5급 기술직 채용 확대('03: 61명)	63	70	80	90	303
계	1,500	2,000	3,000	3,500	10,000

이외에도 금년부터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 채용 인력의 일정비율 이상을 이공계 인

력으로 채용토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10)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정부는 과학기술인의 연령별 생활패턴과 의식변화에 따른 복지목표 설정 및 단계적 추진방안을 담은 『과학기술인 종합복지증진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학생의 이공계대학 진학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2의 『벤처붐』을 점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벤처 실패의 핵심요인을 분석하여 기술벤처 창업자의 경영·기술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와의 협조를 통해 이공계 병역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선, 박사급 핵심인력이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분야에서 복무하는 (가칭) 『과학기술전문장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전문연구요원의 확대 및 복무기간(현행 4년)의 추가 단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연구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출연(연) 연구원에 대해 기술료 총액의 50%(현 35%)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연구원의 경우 직무발명보상제도(특허청 담당)를 통해 연구성과의 일정 부분에 대해 보상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11) 과학기술부 업무 추진의 고객지향성 강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각종 기술혁신 정책과 사업을 단계·주체·프로그램별로 연계하고, 민간기업의 수요에 부합되도록 조정해 나갈 것이다. 기업과 기업부설(연), 조합, 협회 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해 장기 국가R&D사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장관과 경제5단체장이 참여하는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등 주요 범정부 시책을 주제 관련 부처간, 민-관간 적절한 역할 분담 하에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산업계의 기술혁신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정부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연구계·대학·NGO 등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다. 연구현장 목소리를 직접 방문·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행정 관행을 정착시키고, 자연과학대학장 및 공과대학장과의 협의회 모임을 정기화하여 대학의 정책수요를 발굴하는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 과학기술정책 포럼과 S&T Network 21을 구축하여 쌍방향 정책대화 채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5.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의 초석 마련

앞으로 과학기술부는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부처”로서 국가혁신체제를

강화하고 위와 같은 제반 중점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선진경제·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실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 발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구축하는데 견인차의 역할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업, 대학, 출연(연), 나아가 일반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가 필수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을 『과학문화의 해』로 지정하고 국민 생활속의 과학기술을 위한 다양한 과학문화 확산 노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 바, 과학기술인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 드리고자 한다.